

‘한국형 10대 뉴딜’ 45조 조기 투입 ... 내수진작 ‘올인’

국토부 보고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국토해양부는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10대 사업 분야를 ‘한국형 뉴딜’의 대상으로 정하고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와 철도, 4대강 개발, 경인운하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보금자리주택, 국토공간정보사업, 산업단지 개발 등이 포함됐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4.5% 늘었는데, 정부는 내년 SOC 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우선 상반기에 도로와 철도 예산을 각각 60%, 67% 집행해 건설 경기 부양으로 경기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13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에 경기 진작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미술작 구간 연결 공사를 시작하는 경인운하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기임인 한국수자원공사 가 맡는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는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광주 외곽순환도로 2011년 착공

서민 내집 마련 쉽게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10대 프로젝트	기대 효과
①도로사업 집중 투자	시차 없는 경기 회복
②철도사업 집중 투자	
③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국가전략적 투자 확대
④경인운하 조기 추진	
⑤보금자리주택 공급	
⑥도심 재생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
⑦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⑧공간정보사업 투자 확대	기차철도형 SOC 투자 확대
⑨산업단지 조기 개발	
⑩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150만호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10대 프로젝트에 총 45조원(국고 14조8천억원)을 조기 투자하면 79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5만 2천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서민들이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15% 가량 인하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180%에

서 200%로 올리고 토지보상가격 산정시점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새 이름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를 15% 가량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2009년에는 5천가구를 짓고 2010년부터는 매년 1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영구임

대주택의 관리비는 2010년까지 40%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월평균 3만4천600원인 관리비는 2010년에는 2만700원으로 내려간다.

전세형 임대와 10년임대는 매년 5천가구, 2만가구를 공급하고 10년임대 2만가구중 5천가구는 지분형으로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사업은 확대되고 임대단지 등에 기숙형·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시원거주자, 독거노인 등의 주거도 지원한다.

◇지하고속도·급행전철 추진=교통 분야는 도로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과 지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도심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부·경인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서 지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치고기로 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광주와 부산·대구의 외곽순환도로는 2011년부터 착공하게 된다.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업부, 환경부 2009년 업무 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예산 114조 상반기 집행

공무원 철밥통 깎는다 ... '2진 아웃제' 도입

행안부 보고

◇지방예산 114조 조기집행=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전체 지방예산(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이 같은 상반기 지방예산 집행률은 올해의 32%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높아지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에 하반기 예산 53조2천억원 정도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약 64만명의 조기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는 또 내년에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려 국가공무원 3천267명과 지방공무원 4천242명을 선발하고, 대졸 미취업자가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 가량을 받고 1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행정인턴도 중앙 5천200여명과 지자체 5천600

여명, 공공기관 1만명, 지방공기업 1천300명 등 총 2만2천여명 뽑을 계획이다.

지방 공공근로사업에는 1천900여억원을 들여 총 2만6천여명을 고용하고,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 26개 구축을 통해 5천여명,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통해 4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 실현가능한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 강화=행안부는 또 내년에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안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때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위해 제시했던 가치 '3대 신(新) 국민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우선 서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 다가구주택 임차 서민과 지방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 철밥통 깎는다=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등 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인사상 차등대우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위기극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주문한 것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

행안부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당면한 경제난국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환경부 보고

환경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에는 2020년까지 국내 환경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을 세계 5위권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와 함께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세부 계획이 담겨 있다.

환경플랜트산업 분야는 오염부하가 전혀 없는 하·폐수 처리기술을 개발해 2012년까지 해외수출액을 8조원(2006년 1조3천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에 따라 내년에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률도 내년에 75%(올해 63%)까지 늘리고 하이브리드차는 2012년까지 10만대를 보급

내년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천연가스 버스 보급률 75%로 상향

해 상용화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탄소시장을 육성키로 하고 내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범 시행하는 동시에 배출권 거래소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물자원 산업 분야에서는 야생 동식물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자연환경 우수지역이 2012년까지 국내 관광시장의 5%를 점유하도록

한다는 목표에 따라 생태관광 가이드도 양성되고 전국에 생태 탐방로가 조성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라벨링 제도'도 내년 도입되고 '그린스토어 인증제'도 새로 생긴다.

환경건설링 시장을 2012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양성하기 위한 환경정보 공시제 도입과 분야별 환경건설링 인력육성 교육프로그램, 환경서비스업 창업 지원도 내년에 시행되는 정책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저탄소 표지 생활양식'이 제시되고 에너지 사용 절감에 유가증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변화들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우수 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경감되고 지자체와 연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돼 보급된다.

전라남도에서는 온실 온파에 시범 본예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저너 행복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온실 온파에 시범 본예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저너 행복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물 절약, 온실 온파에 시범 본예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저너 행복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 온실 온파에 시범 본예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저너 행복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저너 행복카드를 사용하면 온실 온파에 시범 본예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저너 행복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